

복직 기다리던 쌍용차 조합원 죽음

27일, 김 아무개 조합원 주검으로 발견... “서른 번째 죽음, 회사가 복직 시한만이라도 알려줬다면...”

“그동안 못한 남편 만나 고생만 시키고 마지막에도 빛만 남기고 가는구나. 사는 게 힘들겠지만, 부디 행복해라. 그리고 천하에 못한 자식 어머님께 효도 한번 못하고 떠나서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라.”

“형, 그동안 고마웠어요. 신세만 지고 가네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해고자 김 아무개 조합원이 6월 27일 오후 세상을 떠났다. 해고자와 가족 스물아홉 명이 김 아무개 조합원보다 앞서 한 많은 세상을 등졌다. 김 조합원은 일을 치르기 전 부인과 해고자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 조합원은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고, 낮에



공사 시공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김 아무개 조합원의 죽음은 2015년 12월 30일 해고자 복직 합의 후 사측의 합의서 불이행으로 고통받다 죽은 첫 사례다. 쌍용자동차는 2019년 상반기 신차 생산 등으로 해고자 복직 발령을 낼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합의서 이행을 거부했다.

김득중 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회사가 복직 시한만이라도 알려줬다면, 문재인 정부가 2009년 국가폭력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사해 해결했다면 김 아무개 조합원은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것이다. 해고자 복직이라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싸우겠다” 라고 참담한 심정을 털어냈다.

김 아무개 조합원은 지난 19일 해수로 10년 만에 2009년 8월 5일 당시 특공대를 앞세운 경찰의 살인 진압 피해에 관해 동료들과 함께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다. 김 아무개 조합원은 9년 전 경찰 폭력으로 인해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한다.

금속노조 2018년 교섭 쟁의조정 신청

27일, 중노위 조정신청서 제출...7월 4일부터 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금속노조가 2018년 중앙교섭,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등 전 교섭단위에 대한 임금·단체협약 교섭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6월 27일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을 포함해,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사업장 보충교섭 사업장 등 145 개 사업장, 26,700여 조합원에 대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

다면 노조는 7월 9일부터 쟁의권을 확보해 투쟁에 나설 수 있다.

조기 조정신청한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현대중공업지부 소속 66,000여 조합원을 포함하면 모두 93,000여 조합원이 7월 9일 이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노조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 조합원 총회 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재벌·노동·사법 적폐 청산과 산별교

섭·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쟁취, 임금인상 불가·하후상박 연대임금 불가·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불가 등 현대자동차그룹 3불 가이드라인 분쇄 등을 사회 쟁점화하기 위해 7월 13일 총파업, 상경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부는 삼성이 고용한 노동부인가”

고용노동행정개선위, 노동부 삼성 불법파견 면죄부 확인...경찰청 정보국 간부가 사측 행세 교섭 참석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가 자행한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작성해 제출한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했다’ 라는 보고서를 무시하고, ‘적법 파견’ 으로 결과를 뒤집었다. 노동부는 주무부서인 고용차별개선과가 낸 ‘삼성 불법파견 관련 수사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도 무시했다.

앞서 노동부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삼성전자서비스 14개 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혐의로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다. 노동부는 7월 19일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보고서를 총괄한 경기지청이 ‘불법파견이 맞다’ 라는 보고서를 내자 7월 23일 권 아무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1급) 주재로 고위 간부 회의를 열었다. 노동부는 고위 간부회의 이후 보고서에 적시한 불법파견 결론을 삭제했다. 당시 회의에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삼성 측 견해를 대변했다. 노동부는 2013년 9월 16일 ‘적법 파견’ 이라 결론 낸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선위원회는 삼성과 노동부의 유착관계를 확인하고 검찰수사에 협조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노동부가 수시 근로감독을 통해 삼성 불법파견 혐의에 면죄부를 준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경찰도 삼성의 노조파괴 하수인 노릇을 했다. 2014년 경찰청 정보국 소속 김 아무개 경정은 사장이나 전무로 신분을 속이고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와 지회 사이의 단체교섭에 참여했다. 검찰은 김 아무개 경정이 노조 동향과 정보를 삼성에 전달하고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김

아무개 경정에게 삼성전자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편의도 제공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27일 경찰청 정보국 한남동 분실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성명에서 “노동부와 삼성의 더러운 유착이 최종범, 염호석 두 열사를 죽였다” 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적법 파견이라는 노동부 판정 이후 삼성이 노조파괴를 본격 시작했다” 라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중대범죄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재벌을 위해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켰다. 노동부가 삼성이 고용한 노동부냐” 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재벌 중심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으라” 라고 촉구했다.